

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 융복합·신산업 분야 전담 ‘신산업상표심사과’ 1월부터 본격 운영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 -
- 상표권 취득기간 단축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기대 -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 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상품류로 구분

**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센서의 융합 상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농업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상품) 등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 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 현황>

(단위: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자율주행	92	101	229	303
스마트팜	52	70	76	78
인공지능	547	811	1,326	1,468
빅데이터	718	1,059	1,113	1,170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 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영택 (042-481-5265)
		담당자	사무관	김완곤 (042-481-33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진환 (042-481-5051)
		담당자	사무관	유성전 (042-481-5062)